

대학개혁 및 평가와 대학교육의 발전

서 정 화¹⁾

1. 序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학평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학평가의 영역과 평가 준거 및 기준설정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1990년대 초에는 단과대학별, 학과별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간에 많은 논란과 반발이 없지 않았으나 1994년부터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7개 대학이, 1995년에는 17여개 국·사립대학이 평가를 받게 되었다.

대학평가 결과는 대학으로서의 인정 여부는 물론이고 관계 당국의 행·재정 지원을 얻는 근거자료가 되고 또 해당 대학의 수준이나 위상이 고등학교, 기업체, 학부모 등 사회에 알려지기 때문에 직접 평가를 받게 되는 대학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대학평가와 맞물려서 1995년에 들어오면서 각 대학들은 1996년부터 전개될 고등교육 시장 개방, 2002~2005년 사이에 대학 입학 정원보다 대학 지원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다른 우수 인력 유치의 필요성 증대, 무한 경쟁 시대에 교육기관 간의 치열한 경쟁에 앞서 나가야 한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한 동안 학사 개편, 교수평가, 유사 학과 통합 및 학부제 추진, 발전기금 모금 등에 있어서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하여 언론으로부터 처음에는 바람직한 개혁의 시발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분별한 홍보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31일 개방화,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로 대변되는 문명사적 변화와 도전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면 낙오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작금 각급학교를 비롯해서 교육부·교육청 등에서는 교육개혁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제 각 대학에서도 교육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²⁾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는 대학교육의 발전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소론에서는 대학개혁과 대학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대학개혁의 배경

80년대 이후 주요 선진 제국에서는 활발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미국에서는 1983년 국가 교육진흥 위원회의 보고서 「미국의 위기」(Nation at Risk)에서 미국이 처한 국가적인 위기는 바로 교육 경쟁력의 약화에 있다고 진단하고 교육개혁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본에서도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가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사회 및 미래 정보 사회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21세기를 선도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1988년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의 양적 확대를 겨냥하면서 교육 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1988)을 제정하는 등 고도 산업사회 발전에 부응하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개혁

1)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2) 교육부,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1995.8.8; 국립대 개혁연구팀, 「국립대학교 개혁방안」, 1995.8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통해 각국에서는 제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높여 국가·사회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의 질적 고도화와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교육행정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질 관리를 위한 통제와 자율의 적절한 조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우수교원 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활발한 참여·협조 유도과 함께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서두르고 있다.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나 교육 내·외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개혁의 내용이나 우선 순위, 그 추진 방식이 다르다. 그렇지만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급학교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교원, 평생교육, 제도운영 등 교육의 제반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볼 때 1970년대초의 실험대학 추진에 이어 1980.7.30 과열과외 해소 및 학교교육 정상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편을 비롯해서 졸업정원제 등이 추진되었으며, 대학정원도 많이 늘어나 대학교육의 대중화 내지 보편화 현상이 타나나게 되었고('94년 현재 대학진학율은 79.4%) 이러한 양적 확충에 걸맞는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 동안 교육개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5년 3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육개혁 심의회를 설치하여 1987년 말까지 교육개혁안을 마련하였고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6명이 교육부 장관에 임용됨으로써 교육개혁안을 부분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이어서 1989년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및 중앙교육심의회를 설치하여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한 심의·자문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이렇듯 여러 차례에 걸친 개혁안 마련·추진이 시도되었고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교육 개혁도 부분적으로 대학현장에 적용되었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책 결정자의 의지 부족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한 교육적, 사회적 제반 여건이 조성·성숙되지 못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여러 부문에서 변화와 개혁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동향과 흐름 속에서 대학교육의 개혁을 더욱 촉진시키게 된 배경 및 동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국제화·세계화·개방화의 가속화가 진척되고 있다.³⁾ 종래의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경제·무역전쟁으로 돌입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한편으로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영향받은 교통통신의 발전, 국제적 정보지원 체제의 발달은 국제화·세계화·개방화의 추세를 가속화시키게 되었으며 이제 세계가 하나의 생활 단위인 '지구촌'으로 인식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각국은 우수한 인적 자원개발에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보고 교육개혁에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둘째, 성숙된 정보화 사회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 우리 사회는 1970년 이전에는 농업사회로, 1980년대 초반에 공업화 사회로 발전 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정보화 사회에 돌입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정보 통신망의 발달됨에 따라 각 나라들은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우위를 판가름할 핵심적 관건이 첨단 정보기기 및 통신매체의 개발·활용에 있

3) 황정규 외, 「교원 교육개혁을 위한 종합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95, pp. 11~15; 윤정일 외, 「21세기 한국교육의 선택」, 교육정책자문위원회, 1992.

음을 인식하고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구조의 창출과 거기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준비에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학은 바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셋째, 다원화·전문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사회의 산업구조가 바뀔에 따라 사회 구조 내의 조직·운영은 전문화되고 기능의 분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다원화 사회에서의 직종의 분화는 전문 인력과 지식계층의 폭을 넓히고, 고학력의 경향은 사회계층의 상승이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다원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타고난 소질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확실적인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제도 운영과 교육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다.

넷째, 정치·경제에 있어서의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 동안 정치·행정의 중앙집권화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었지만 이제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특히 '96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권력과 행정력의 지방분권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시행으로 시민 공동체 의식과 지역 자립의식이 고조되어 지역개발에 대한 경쟁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체의 실현은 정치적인 권력의 분산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방분산과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특히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경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인구의 이동 및 교육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이제까지도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여 지방에 분산·유도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거니와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2002~2005년 사이에 15세 미만의 인구가 감소하여 대학 진학인구와 대학 정원이 비슷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⁴⁾ 이는 바로 대학이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유치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제반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따라 더욱 자유롭고 활기찬 세계화·국제화 사회로 뻗어 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세계화로 표현되는 문명사적인 변화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의식구조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 방법, 제도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⁵⁾

- ① 세계화 시대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은 세계 수준으로 질적 도약을 해야 한다.
- ② 세계화 시대에 우리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여러 나라와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③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문화 의식을 지닐 뿐 아니라,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④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교육에 있어서 자율과 분권의 원리가 실천되어야 한다.
- ⑤ 정보·지식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공통 기본교육 연한의 상향 조정이 요청된다.
- ⑥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업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와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생업교육(생업교육)'이 현재의 중등교육 수준으로부터 고등교육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4) 하인호, 「21세기를 잡아라」, 고도 컨설팅그룹, 1993, pp.149~176.

5) 교육개혁위원회,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5.5.31, pp.3~10.

- ⑦ 정보와 지식의 변화가 급속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성인의 재교육이 삶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계속교육, 평생교육은 정보화 사회와 동반관계에 있다.
- ⑧ 첨단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이 교육에 도입됨으로써 전통적인 교육제도 운용,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 등에 혁명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 상황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에 대한 요청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학들은 국제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세계화를 선도할 우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획일적인 대학체제, 연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여건과 풍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학사운영, 효율적 대학운영을 방해하는 각종 획일적인 정부 통제 등으로 대학의 질적 수준은 세계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⁶⁾

3. 5.31 교육개혁 조치와 대학개혁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新교육체제의 비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에 두고 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대한 대한민국학교를 건설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아를 실현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新교육체제에서의 고등교육 관련 목표는 대학운영을 자율화하고 연구여건을 세계화하며 대학모형을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과학기술 창조의 산실이 되며,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최적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두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가.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1)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먼저,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에 알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학 모형을 대학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수성에 알맞도록 대학을 특성화하고, 다전공·복합학문 연구가 가능하도록 최소전공인정 학점제(총 이수 학점의 1/4~1/6)를 도입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세계화·정보화 관련(예: 정보통신, 통상외교, 디자인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부없는 별도의 단설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학설립,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획일적인 학교설립 기준을 지양하고, 학교의 설립 목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설립 기준(시설·설비, 교원 및 적정 재정규모 등)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1996학년도부터 시행하되 비수도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대학정원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하고, 학사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학위의 공신력 및 국제적 통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칙주의에 의하여 신설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학위

6) 교육개혁위원회, 전게서, 1995, p.36.

7) 교육개혁위원회, 상게서, p.25.

인정제를 도입한다. 대학정원 자율화는 1997학년도부터 시행하되, 비수도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3) 학술연구의 일류화

대학의 연구수준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외국 석학과의 공동연구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석학과 공동으로 편집하는 한국 주도의 국제 학술지 발행을 지원한다.

그리고 교수가 어디서나 국내·외 중요한 학술자료 및 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정보 데이터 전산망 및 국내 각 대학의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학술정보 센터를 설립한다.

아울러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을 교수연구비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우수 교수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가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가 소속한 대학에는 그 연구비 수준의 간접비를 지급한다.

4)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연계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추구하는 한편 대학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 개별 대학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3~4년 주기로 대학연구 및 인재양성에 대한 종합평가와, 1~2년 주기로 교육수요자의 대학만족도 조사 및 대학의 특성화된 영역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해당 대학 이외의 기관(예: 정부, 대학교육협의회, 산업체, 학생·학부모 등)에 의해 실시한다. 대학의 자체평가와 해당대학 이외의 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재정을 차등 지원하되, 지원 단위를 대학에서 계열 또는 학부(또는 학과) 단위로 전환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한다.

5) 대학교육의 국제화

국제관계 전문요원 및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국제 지역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국제관계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수를 늘리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우리 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문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나.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1) 열린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객관적으로 평가·인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은행제(credit bank system)를 도입한다. 그리고 학생이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파 학교를 연결시키고, 또한 교육기관이 서로 연결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학점당 등록제, 정원의 자율적 운영, 졸업년한의 연장 등이 함께 추진되도록 한다. 아울러 대학의 편·입학을 용이하게 한다.

이 외에도 첨단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원격교육 등을 통해 농·어촌을 교육장화하고 여성 및 노인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원격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2)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가칭) 설립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업·기술교육이 정보공학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열린교육체제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모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개발·지원한다.

다. 대학입시제도 개선

확일화된 암기위주의 입시준비 교육, 과열과외 현상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공동화 현상,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하되, 국·공립대학은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사립대학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은 1997학년도부터 필수 전형자료로서 종합생활기록부를, 선택 전형자료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면접, 실기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사립대학은 1997학년도부터 자율적으로 학생선발기준과 방식을 정하여 선발하되,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② 국민의 사교육비(과외비) 부담을 과감히 축소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 ③ 각 대학은 학생 선발방식과 기준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예고하여 학생, 학부모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학생선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은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와 연계하여 학생을 연중 어느 때나 모집할 수 있게 하고, 대학들이 일정기간에 모집하는 경우에는 선발 일정을 다르게 하여 실질적인 복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예: 추첨제 또는 면접 날짜 예약제 등).

라. 기타 관련 사항

1) 세계화 교육 실시

학사과정 학생들의 해외 연수 및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 학점교환제, 자매결연 등을 통한 학생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PC통신, 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통한 외국 학생과의 교류 및 학술교류를 장려·지원한다.

2) 교육과정 평가원(가칭) 설치·운영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높이며, 공신력이 높은 다양한 평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평가원을 신설하되,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며, 타 기관의 대학평가 업무지원, 학점은행제의 운영과 이에 따른 학위검정 및 수여, 학위인정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을 1988년까지 GNP 대비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상과 같은 대학개혁 방안은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

해 다음 몇 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학생·학부모를 주로하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필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자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공급자인 대학과 교수, 교육행정기관 등의 편의 중심으로부터 탈피하여 교육공급자 간의 다양한 프로그램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담겨져 있다. 이를 테면, 최소 전공 인정학점제 도입이라든지, 시간제 학생등록 실시, 학교현장 제정 권장, 예·결산 공개의 의무화, 학점은행제의 도입, 전·편입학 허용 등이 그것들이다.

둘째,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화,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종래의 획일적이고 규제중심의 교육운영으로부터 벗어나서 대학의 자율성 폭을 확대하여 대학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비롯해서 대학정원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 대학모형의 다양화, 대학입시에서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 허용 등이 그것이다.

셋째, 대학의 사회적인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사회의 공공 목적과 이익을 위한 公器로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대학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학입학 전형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사립대학의 경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과외비) 부담 축소, 학생선발 방식과 기준의 예고제 도입, 예·결산의 공개제도 의무화, 대학평가 강화 등이 그것이다.

넷째, 대학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학의 자생력을 키우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인 행·재정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연구와 재정지원 연계를 강화하여 우수 교수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그것들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 동안 교육개혁 추진에 9조 4천억원의 추가 제정을 투입하되, 대학교육 등에 2조 9천 11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며 그 실천이 기대되고 있다.⁸⁾

끝으로, 대학을 우리 사회가 개방화·국제화·세계화로 발전하도록 뒷받침하는 전진기지가 되도록 지원·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학의 연구여건을 세계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과학기술 창조와 산실이 되도록 지원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계 수준의 첨단학술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세계화·정보화 관련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국제관계 및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치 및 지역연구 활성화·지원, 외국인 유학생 수 및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그것들이다.

4. 대학평가 인정제

세계화·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개혁은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국제적인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이 소위 '대학입시 욕구'와 '대학생 인구 수' 뿐이라는 지적 속에서 대학교육의 질에 관한 평가는 대학개혁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92년부터 학과평가 및 '94년도부터 '종합평가인정제'가 시행되고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 발표 및 시행에 따라 대학평가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동안 대학평가인정제의 도입 실시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었으나, 다만 평가의 영역 및 기준과 실시 시기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대체로 평가실시 기준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를테면 대학평가를 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상세한 평가기준 내지 준거가 마련되고, 이

8)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1995.8.30

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든지 평가의 목적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 촉진하고 대학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데 있다고 볼 때 각 대학에서 평가에 대비하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리하여 대학평가 인정제의 도입·실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90년대 초 이후 평가기준 내지 준거가 많이 수정·보완되었고 앞으로도 일부 평가기준의 미비점이 더욱 보완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학평가인정제 실시·운용을 통해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대학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지금 평가인정제가 도입되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이 앞다투어 유능한 교수들을 초빙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평가인정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 동안의 대학종합평가의 가시적인 성과로서 교수당 학생수는 1985년의 37.7명에서 1993년에 27.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장서수는 각각 1990년의 5.5명과 23.1권에서 5.1명과 27.9권으로 개선되었다. 이외에도 대학의 교수 및 시설설비, 교내 전산망 구축 및 도서관 전산화 등 외적인 교육여건 등을 비롯해서 교수업적평가제의 추진, 장단기 발전계획 및 재정부호 계획의 수립·추진 등 질적인 개혁도 이루어지고 있다.⁹⁾

앞으로 그 동안의 대학 종합평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교육여건은 물론이고 교수의 연구분위기 및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고,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지표 제공 뿐 아니라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고교졸업생의 진학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은 정부기관, 기업, 학술지원단체 및 일반사회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¹⁰⁾

그러나 대학평가 인정제가 개별 대학의 특성이 고려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못한다든지, 평가기준과 요구에 맞추어 투자를 하게 되어 대학의 특수성 신장 및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평가결과의 발표 및 활용의 한계 등과 같은 지적이 있고 보면 이를 더욱 보완·개선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앞으로 대학평가의 과정과 결과는 각 대학들로 하여금 더욱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대학을 지원·조성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유도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사회적인 공신력을 높여 나가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대학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의 개방화·다원화 추세 속에서 지난 '94년 9월 중앙일보에서도 전국 131개 대학의 제반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교육부, 국회, 기타 언론기관에서 부분적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학 자체적인 평가는 물론이고 여러 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대학개혁의 추진과 대학평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대학에서 대학평가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학사개혁이 추진되었고, 5.31 교육개혁방안 발표이후 대학개혁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관계 당국에서는 앞으로 교육개혁의

9) 이상주 외,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실험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5, pp.1~4, pp.107~109.

10) 이상주 외, 상거서, pp.109~111.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48개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선정하였는데, 그중에서 25개 과제들이 대학교육 개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학개혁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교육개혁추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되, 각 대학에서는 교육개혁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추진홍보위원회를 위촉하도록 하는가 하면 교육개혁 추진 사례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96년부터 상·하반기별로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고 기획단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수범기관에 대하여 지구노력 지원비 등 각종 지원예산을 차등 지원 또는 전략적 중점 지원을 하는 등 대학개혁 추진과 연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¹¹⁾

관계 당국의 강력한 교육개혁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각 대학에서의 반응은 일단은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당위의 과제'로 보고 호응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20여년 전에 추진된 실험대학 사례에 비견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학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단은 재정지원과 관계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신과 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그 동안 제기되고 있는 쟁점 사항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사학과의 통·폐합 및 학부제 도입

지금과 같이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면 학문영역이 통합되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과나 전공 선택이 제한되는 데다가 학과의 폐쇄적 운영 등으로 유사교과목이 중복, 개설되거나 교수들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폐단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금년부터 학과통합을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세분화된 유사학과를 통·폐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학문분야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복수전공, 다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학부전공에서 교양과정을 폭 넓게 공부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는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들도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도록 함으로써 실무 적응능력을 키우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바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대학교육의 보편성과 학문적 수월성 추구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근자에는 학부제 또는 단과대학별로 학생모집을 하고 신입생 전원을 학과구분 없이 선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학원 중심·연구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도 아니고 학부중심 내지 교육중심 대학이면서도, '바람몰이식' 추진방식에 휩쓸려 또는 재정지원을 의식하여 앞다투어 물리적인 학과 통합이나 계열화를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¹²⁾ 또 학부제 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인 학과의 교수 및 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¹³⁾ 따라서 이러한 학부제 도입은 대학의 특성을 살려 단계적인 추진이 요청된다고 본다.

2)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도입

대학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부제 실시가 확산되는 것과 함께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채택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최소전공인정학점제는 학생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개설한 전공 교과목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을 인정해 줌으로써 다전공, 복합학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11) 교육개혁추진 기획단, 「교육개혁추진 관련 회의 자료」, 1995.9.27.

12) 중앙일보, 1995.10.7

13) 이성호, "바람몰이식 대학개혁 지양을", 한겨레신문, 1995.10.9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총이수학점 140학점의 25%에 해당하는 35학점 이상을 최소전공인정학점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학무 81510-1234호, 1997.9.7).

이러한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통해 학생중심의 교육운영이 가능하고 학과 중심의 폐쇄성을 탈피하도록 함으로써 교수의 강의내용과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최소전공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전공선택에 있어서 인기학과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고, 비인기학과 학생들의 공동화 현상이 유발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엄격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의 교과목 선택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소전공인정학점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이로 인한 예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별, 전공별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이며 단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수의 주당 책임시수 하향조정을 비롯하여 폐강기준의 완화, 교육시설 구비 등 교육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3) 전과 및 편·입학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총 정원 및 학과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과 및 편·입학을 용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에서는 군입대자 수만큼 편·입학을 허용하는 동시에 전과의 경우 전입 학과 정원의 10%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과 및 편·입학제도 역시 학생 입장에서 탄력적인 학제운영을 통해 학생의 적성에 따라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기회를 주자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과 및 편·입학이 용이하도록 함에 따라 대학 내에서의 비인기학과로부터 인기학과로, 선발대학으로부터 후발대학으로의 연쇄적인 학생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서 학사관리상의 번거로움과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 유발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수평가제 및 계약제

교수의 업적 및 강의 평가제가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 구미 선진국에서나 시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즉흥적인 발상'으로 지적하면서 교수평가제의 전제조건으로서 주당 강의시수를 줄이고, 교수들을 충원하는 동시에 연구수행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대학의 체질 개선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각 대학에서 교육, 연구, 봉사 등 영역별로 교수업적을 평가하여 승진, 재임용, 정년 보장 뿐 아니라 승급이나 호봉책정 등 인사관리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재임용 및 승진 관행에 따른 교수들의 안일한 교육 및 연구 태도를 지양하고 경쟁적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계약제로 교수를 채용한 후 계약기간 동안의 연구·강의 등을 평가한 후 정규 교수로 채용하자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또 일부대학에서는 교수 업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및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승진자료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교수업적평가제는 평가요소가 기준,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이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교수의 교육·연구·봉사활동을 유도·촉진하는 기재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제 등은 자칫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대학개혁 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 보았거니와 이 외에도 대학조직, 인사, 재정 등의 효율화, 계열별 입학정원제 전환, 선발시기 및 방법의 다양화를 비롯해서 최저 졸업소요 학점 다양화, 대학의 특성에 따른 학기제 운영 및 교양 교과과정 운영 개선 등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¹⁴⁾

앞으로 대학개혁의 추진 및 대학평가는 행.재정 지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 점검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고 보며, 예시적으로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 당국에서는 대학교육개혁을 ‘획일적으로 밀어부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개별 대학의 특성과 창의성을 살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종 교육개혁안의 추진기구 설치 및 실제 보고 등에 따른 업무량 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인의 불만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둘째, 각 대학에서는 대학평가와 연계된 재정지원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다른 대학의 움직임에 민감하기보다는 개혁방안을 취사선택하여 구성원들간의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각 대학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방식은 지나친 경쟁 논리에 바탕을 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거나 先發대학에 유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後發대학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각 대학 교수들이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이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원책이 뒤따라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평가의 기본적인 목적내지 의미는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¹⁵⁾

6. 대학의 대응 방향 및 과제

이상에서 대학개혁의 추진 및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았거니와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진작시켜 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대학개혁이나 대학평가는 일회적인 과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각 대학에서 추구해야 할 대응 노력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개혁이 성공하려면 ‘대학개혁’ 또는 ‘대학평가’라는 구호 아래 ‘위로부터의 개혁’ 추진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교육본질 추구를 통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개혁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앞으로 교육시장 개방에 따라 해외 우수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한다든지 첨단 정보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해 우수 학생들을 유치해 갈 가능성이 높고, 또 2000년대 초에 학령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특수성을 살려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에서 인정받는 졸업생을 배출하고 효과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교육현장 등을 제정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와 사회에 알려주고 발전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학부모, 사회의 호응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14) 국립대학 개혁연구팀, 전거서, 1995.8

15) Daniel L. Stufflebeam, et al, Educational Evaluation & Decision Making, P.E. Peacock Publishers, Inc, Itasca, Illinois

것이다. 동시에 학생 정원 자율화 및 학점제 등록 등을 예상할 때 학생을 연중내내 선발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 개편·운영이 요청된다고 본다.

셋째, 교육과정개편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일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학과 중심의 단일 전공을 이수하도록 짜여 있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폭넓은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전공 필수과목 축소, 교양과목의 의무비를 철폐, 3~4학기제 도입이라든지, 교양교육의 변화 등을 추구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전체 학점의 하향 조정을 포함하여 최신의 학문 동향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개편 운영 등의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넷째,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 유지,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대학은 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수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대학평가인정제 실시를 계기로 그 동안 여러 대학들은 우수한 교수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교수 1인당 학생수 1:20이 될 때까지 계속 교수를 충원해나가고, 수업시수도 9시간으로부터 6시간으로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교수들을 초빙하는 것 못지 않게 이들을 관리,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예컨대, 적절한 보수 지급이라든지 근무여건 개선, 복지·후생 확충, 연찬 프로그램 제공을 비롯해서 교수들로 하여금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하도록 돕는 동시에 다양한 수업방식 도입과 함께 봉사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마다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최신 교육 기자재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실험실습설비 확보율은 저조하고('94년 전국 평균 설비 점수 확보율 58.0%, 설비 종수 확보율 45.5%)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비한 점이 많다. 우리도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최상의 교육시설 설비를 구비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설·설비의 활용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영혁신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에서 최근 '벤치마킹(benchmarking)',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등의 새로운 경영 기법을 적용하여 조직의 혁신을 기하고 생산성 증대 및 종업원의 직무만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에서도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공간활용 등 교육활동 및 이를 직접 지원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낭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비능률적인 경영·관리 방식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에 국립대학에서도 대학 조직을 개편하기도 하고 근검,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보려고 애 쓰고 있는 것 같다. 대학의 특성이나 규모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겠지만, 학생들의 납입금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재정을 절약하고 알뜰하게 꾸려가려는 시도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학사관리 업무를 전산화, 자동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 충원을 억제하면서 최대한으로 인력을 개발하고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전계획 수립·보완을 포함하여 기획·조정 능력 강화와함께, 3~4년 주기로 예산 집행 및 성과분석 등을 비롯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곱째,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발전 즉,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 우수 교수 확보라든지, 현대적인 교육시설 확충, 도서 확보, 최신 교육·연구 기자재 확보 등을 비롯한 발전 청사진을 마련, 실천하려고 하면 결국은 돈이 관건이 된다. 대학

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은 재정 투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동안 각 대학에서는 재정의 80% 이상을 학생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 등록금 인상도 한계에 도달한 듯 하다. 그리고 국가에서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의 재정 상황도 한계가 있고 사학재단도 취약하기 때문에 재단 전입금을 계속 증대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만도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발전기금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거니와 이러한 모금 활동은 순수한 애교심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대학의 전통이나 특성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개방화·국제화 등 국내·외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원·학생의 국내·외 교류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활용 뿐 아니라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체, 연구소 등과의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다양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7. 結

대학의 개혁은 정보화·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대적인 요청이다. 그리고 대학평가 역시,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책무성을 향상시키자는 데 있다. 따라서 대학개혁과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개혁이어야 한다. 또한 대학평가는 바람직한 대학의 발전 방향을 유도하는 경영의 한 과정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과 평가활동은 선의의 경쟁체제 확립을 통해 각 대학의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전체 대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